



# 한국 vs. G5 조세체계 비교와 시사점

## -한국 3대 세목(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) 중심으로-

### SUMMARY



#### 세부담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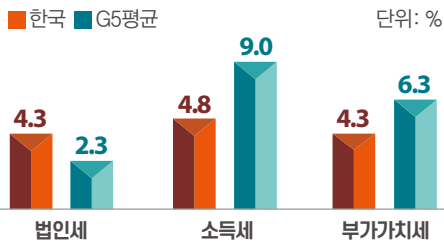
한국은 G5 국가 대비 법인세 부담 높고, 소득세·부가세 부담 낮은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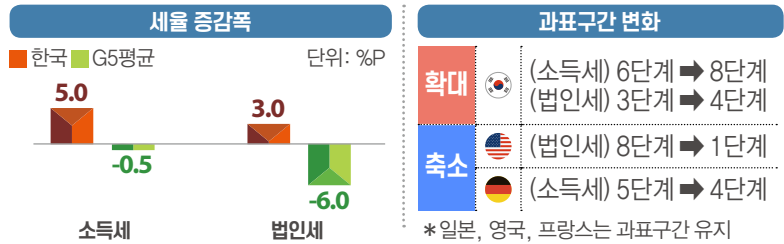
#### 조세동향

한국은 소득·법인세 과세 강화 vs. G5 국가는 과세 완화 혹은 유지

조세부담(GDP 대비 세수비중) 구조('19년)



한국 vs. G5, 소득·법인세율/과표구간 변화 추이('17년 대비 '21년)



\* 주: 조세부담(GDP 대비 세수비중)의 가장 최신 통계는 '20년이나, 코로나19 영향(ex.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 등) 배제를 위해 '19년 기준으로 비교  
\* 자료: OECD, PWC tax summaries 등



#### 한국 조세체계 문제점

① 국민·기업 세부담 증가속도 빠르고, ② 고소득층에 조세부담 편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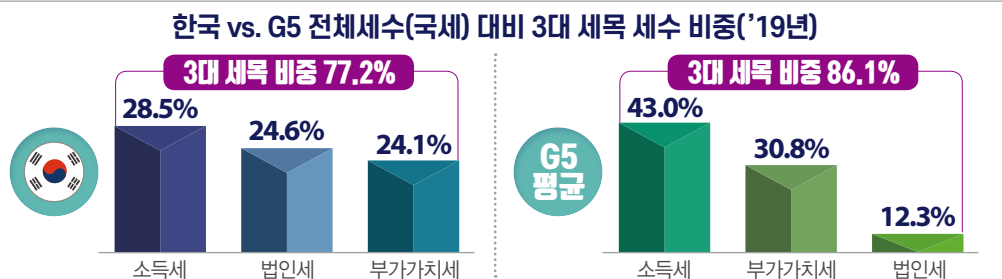
#### 과세

'넓은 세원, 낮은 세율' 통해 조세경쟁력 높여 경제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 도모

3대 세목은 한국 및 G5 국가가 세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세목

### 3대 세목의 중요성

3대 세목(소득세·법인세·부가세) 세수는 국내 전체세수(국세)의 77.2% 차지  
\* G5(평균)의 전체세수 대비 3대 세목 세수 비중도 86.1% 수준



\* 주 1) 가장 최신 통계는 '20년이나, 코로나19 영향(ex.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 등) 배제를 위해 '19년 기준으로 비교  
2) G5 평균 부가세수 비중은 미국(부가가치세 미부과)이 제외된 수치  
\* 자료: 국세통계,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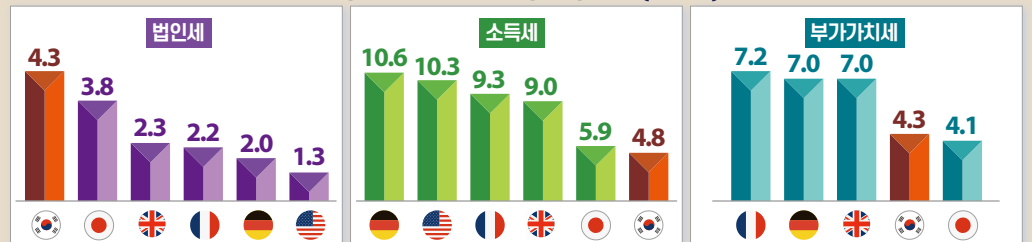
### 한국 vs. G5, 3대 세목 과세체계 현황 및 동향 비교

#### 1 조세부담(GDP 대비 세수 비중) 구조

❖ 법인세 한국 4.3% > G5평균 2.3%, 소득세 4.8% < 9.0%, 부가세 4.3% < 6.3%

한국은 주요국 대비 법인세 부담 높고 소득세·소비세 부담 낮은 구조

한국 vs. G5 3대 세목별 부담률('19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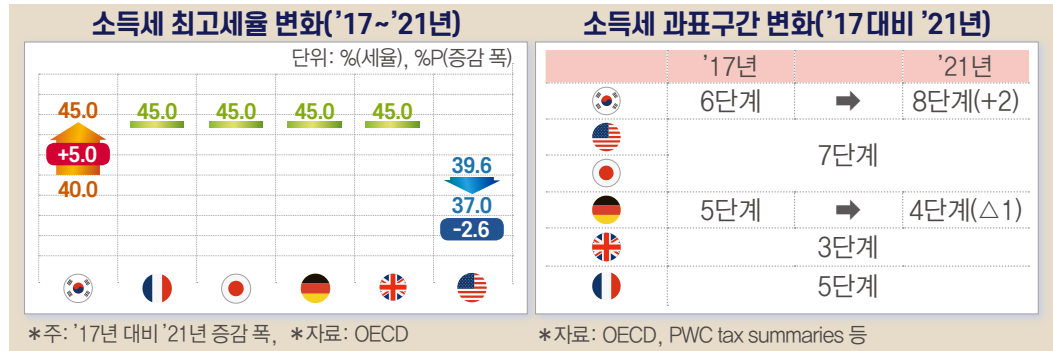
\* 주 1) 가장 최신 통계는 '20년이나,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'19년 기준으로 비교  
2)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(이하 본문에서 동일)  
\* 자료: OECD

## 2 서울(중앙정부 기준) 및 과표구간

※ 서울·과표구간은 경기 여건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닌 조세정책의 일부이므로, 최신 현황('21년)을 기준으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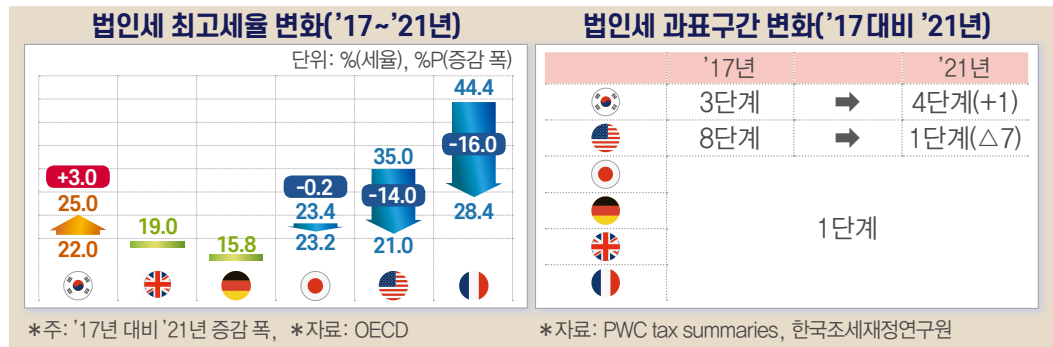
- ❖ **소득세** (최고세율) 한국 45.0%vs.G5평균 43.4%, (과표) 8단계 vs. 5.2단계  
\* 최근 5년('17~'21년) 간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을 단계적으로 인상&확대

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소득세율 인상, 과표구간 확대



- ❖ **법인세** (최고세율) 한국 25.0%vs.G5평균 21.5%, (과표) 4단계 vs. 1단계  
\* 한국은 '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(22.0 → 25.0%) 및 과표구간(3천억원 초과)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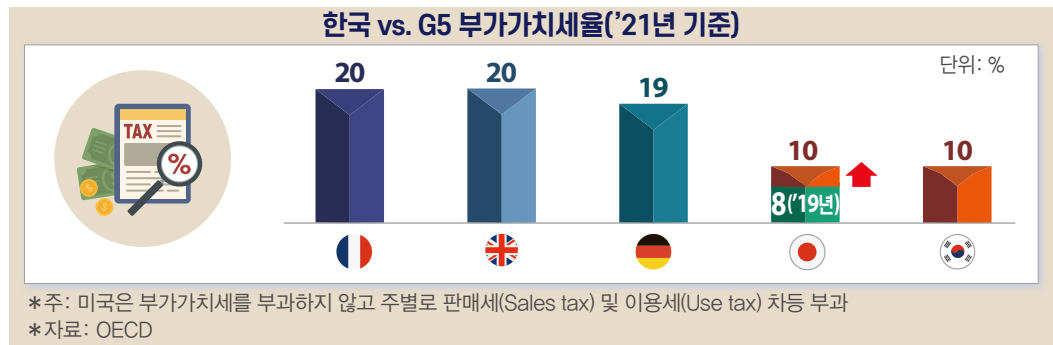
G5와 달리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확대



\* OECD 38국 중 4단계 이상 과세체계 운영 국가 한국 유일 (국회예산정책처)

- ❖ **부가가치세** (세율) 한국 10% vs. G5평균 17.3%, (과표) 한국·G5 모두 단일세율  
\* 일본은 '19년 부가가치세율을 8 → 10%로 인상, 그 외 국가는 기존 과세체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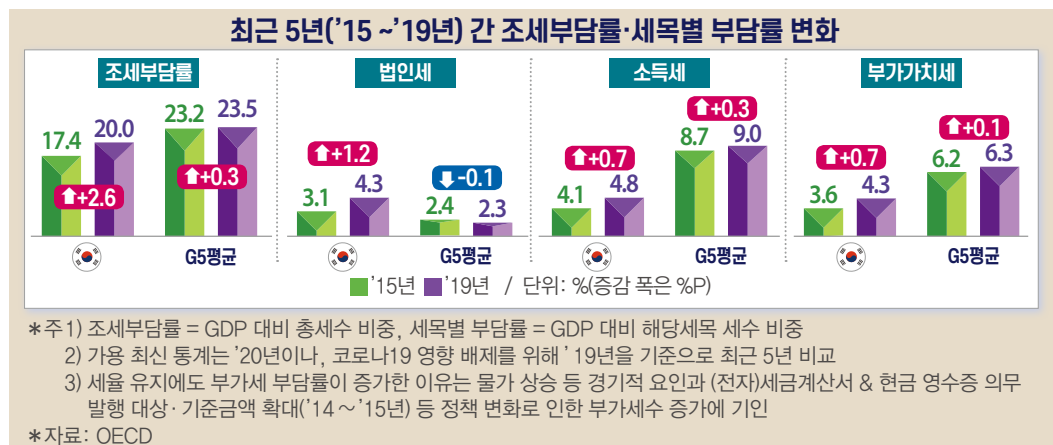
G5와 한국 모두 부가세 단일세율 체계 및 세율 유지(일본 제외)



## G5 국가와 비교한 한국 조세체계 문제점과 조세개혁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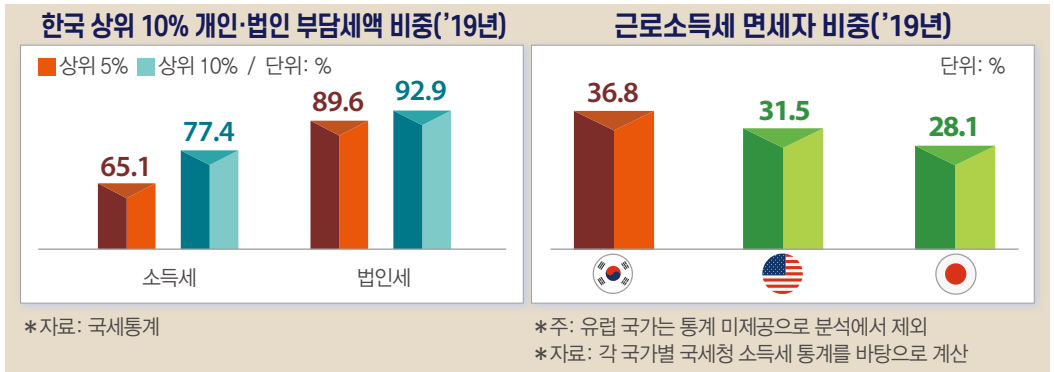
- ⚠️ 국민·기업의 조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활력을 저해

지난 5년 간 세율 인상 영향으로 소득·법인세 부담 빠르게 증가



① 소득계층·기업규모별 조세부담 격차 크고 면세자 비중 높아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형평성 저해 \*국민개세주의: 모든 국민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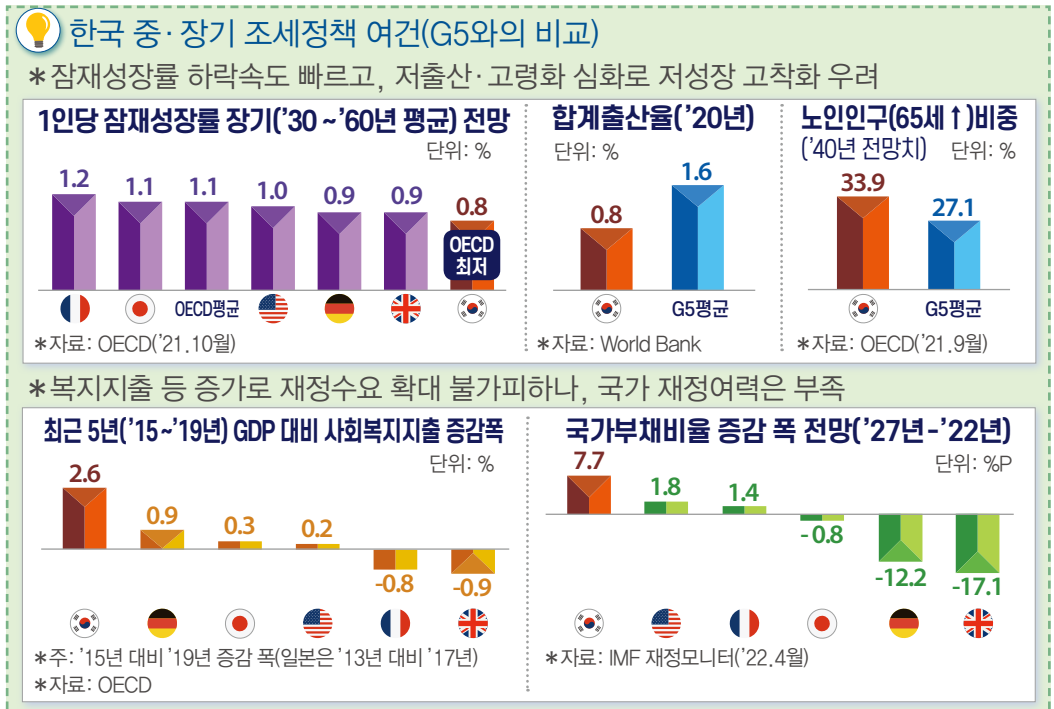
고소득자·대기업  
세부담 비중 높으며,  
면세자 비중  
한·미·일 중 최대



② 세부담 합리화 통한 조세경쟁력 제고로 경제 성장, 세수 확충의 선순환 유도

세율 인하, 세원  
확대로 조세경쟁력  
높여 경제성장 &  
세수확보 실현해야

- ① 세율 인하로 국민·기업 세부담 완화 → 경제성장 통한 세수기반 확충  
 \*법인세율 1%p 인하시, 설비투자 3.6% 증가(한경연, '22.4), 성장률 0.1%p 증가(한국경제학회, '21.4)
- ② 불필요한 비과세·감면 정비 통한 세원 확대 →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 
 \*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위주 증세보다는, 비과세·감면 정비를 통한 면세자 축소가 우선



③ 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



쟁점과 체크포인트

- ✓ 한국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소득·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·기업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며, 특히 고소득층에 세부담이 편중
- ✓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('낮은 세율, 넓은 세원') 방향의 조세개혁 필요  
 \*경제성장 제고를 위해서는 세원을 넓히고(Broadening the tax base), 세율은 낮추는(Lowering the rate) 조세개혁 방향이 바람직(OECD, '10년)



# 글로벌 싱크뱅크 FOCUS



## Policies Critical to Economic Recovery Set to Expire Soon

경기 활성화 위한 기업 세제혜택, 일몰기한 임박

Daniel Bunn, 2022. 5월

<https://taxfoundation.org/business-tax-reform-expiring/>

### SUMMARY

주요국들은 경기 회복과 투자 촉진 목적으로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(투자세액공제 등)을 확대 시행했으나, 일몰기한 도래로 곧 종료될 예정

- ❖ **미국** 보너스 감가상각(Bonus-Depreciation)<sup>㉠</sup> 제도 도입('17년)
  - '23년 이후 단계적 폐지 예정
  - \*주) 자산 구입 첫해에 예년보다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비용공제 규모 확대
- ❖ **영국** 기계설비 투자액의 130% 소득공제(Super-Deduction) 허용('21년)
  - '23년 일몰 예정

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감면 제도를 항구화하는 것이 바람직

- ❖ 한시적인센티브는 기업 투자 증대보다는 기존 투자계획의 조기 집행만 유인
- ❖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전환, 코로나19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사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투자비용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 전망
  - 세제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,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



## Record Number of Job Openings Shows Biden Policies Have Created Massive Labor Shortage

구인자 사상 최대: 바이든 정책이 부른 인력부족 현상

Heritage Foundation 2022. 5월

<https://www.heritage.org/press/heritage-expert-record-number-job-openings-shows-biden-policies-have-created-massive-labor>

### SUMMARY

'22년 3월 기준 미국의 구인 공고(Job Opening)가 1,150만건으로 역대 최대, 구직자 1명 당 취업 가능 일자리 수 1.94개

인플레이션과 인력부족 현상에 중소기업 임금·가격인상 불가피

- ❖ 기업 절반(49%)이 3월 임금을 인상, 28%는 향후 3개월 내 인상 예정, 3월 제품 가격을 올린 기업도 72%(NFIB, 중소기업 CEO 설문조사, '22.4월)
- ❖ 임금·물가 충격에 3월 중소기업 낙관지수(93.2)<sup>㉠</sup> 작년 4월(95.7)에 최저(〃)
  - \*주)중소기업 낙관지수(Optimism Index):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,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낙관, 이하이면 경기 불황으로 판단

노동시장 미스매치 원인: 위드코로나로 인한 실적회복 기대로 인력 수요 증가 vs. 정부의 지나친 실업급여로 근로 유인 감소 및 노동 공급 위축

\*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실업급여(50개주 평균 주당 387\$)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300\$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(America Rescue Plan)에 서명('21.3월)